

◆특집...정부측 여론조사와 통계자료의 허구성 (上)

농촌, 치밀한 수치조작의 놀이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도출된 통계는 대중들에게 가장 공신력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므로 많은 대중들이 접하게 된다. 그리하여 발표된 통계는 여론조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부분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권력의 지배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밀한 도구로써 대중의 눈을 가리는 데 쓰여지고 있다.

본고는 한국 농어촌 사회에 관련된 통계상의 허구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I. 민중과 통계

통계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수치화한 것으로 제반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쓰여진다. 통계는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근거로 기능하는데, 특히 종속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이 총자본으로서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자주 이용된다. 국가권력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통계가 어느 계급의 계급의지를 실현하는데 이용되느냐가 판가름 되며, 역으로 통계의 본질과 내용을 통해 국가권력의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다.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는 통계법(1975년 12월31일 제정)에 의해 국가가 인정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법인들만이 통계를 작성, 발표할 수 있고 정부의 일괄적인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민주화, 민중적 통계의 실현이아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제가 된다.

본 글에서는 농업통계를 중심으로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생각해 본다.

II. 농업통계의 문제점

지난해 하반기 임시국회의 농업수산물위원회에서 생산비 통계에 관한 소동이 벌어졌다. 즉, 농업수산물부와 농업의 생산비 통계치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통계가 자체조사한 생산비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이 언론에 폭로되자(89. 10. 24 한국일보) 이것이 '정부의 입력' 때문인가 농업협동조합의 '오버센스'에 의한 자기검열' 때문인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며 국회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당시 농업중앙회측의 조사는 처음으로 쌀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88년 정부수매가와 비교하여 14.9%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수산물부의 답은 5.2% 인상요인(양곡유통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한 결과 7.3% 인상요인으로 나타난다)과 10% 가량

없었으며 조사 범위의 제한성과 통계법에 의해 농업이 자체 생산비 조사를 할 수 없어 간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농민들은 농민의 자주적 경제협동체인 농업이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관한 조사를 왜 통계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보도했다.

통계법에 의하면 농업이 민법의 법인에 해당되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업통계의 첫째 문제점은 바로 통계조사의 자주성 문제이

다. 다음 지적할 것은 통계조사의 진실성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물가통계와 최저생계비 통계, 수출입 통계와 소득통계 등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높았던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중 여기서는 농가소득통계와 생산비 통계를 중심으로 정부통계의 신

뢰도를 따져 보았다. 물론 농업수산물부의 생산비 통계는 전국 2천호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협회는 500호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성의 차이는 있으나 오차가 크지 않으며, 더우기 농업통계의 조사방식도 농업수산물부의 조사방식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정부의 조사 통계의 허구성 문제의 논란을 증폭시켰다.

당시 국회에서 해명해 나간 농업중앙회측은 '결코 정부압력은

방심 여부와 그 의도를 따져 보기로 한다.

(1) 농가소득 통계의 허구성

농업수산물부의 발표에 의하면 88년도 농가소득은 다음 <표1>과 같이 호당평균 8백13만원이다. 88년도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 9백10만 9천원의 89.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과장된 것이다.

첫째, 포함시켜서는 안될 가공의 소득을 빼야 한다. 농가소득 = 농업소득 + 농업외소득이고 농업소득 = 농업수입 - 농업경비이며, 농업외소득 = 농업외수입 - 농업외경비이다. 그런데 농업수입부의 소득통계방식에 따르면 농업수입입 속에 재고농산물 증감액과 대농산물 증감액을 포함시켜 계산한다. 그러나, 재고농산물은 '재고'로서 아직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농가소득에 넣지 말아야 하며, 대농산물(소, 유제품 등) 증

<표1> 88년도 소득 구성 (호당평균, 단위: 천원) (자료: 농업수산물부, '농가소득조사결과보고' 1989년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합계
8,130	4,912	3,218	8,130

<표2> 1988년도 정부통계를 재조정된 농가소득 (호당평균, 단위: 천원) (자료: 농업수산물부, '농가소득조사결과보고' 1989년도)

농가소득	재고농산물	대농산물	이전수입	재고정환농가소득
(가)	(나)	(다)	(라)	(가나나라)
8,130	662	461	1,405	5,602

<표3> 정부 소득 통계 방식의 기만성 대비(조사농가의 경제규모별 농가구성 비교)

구분	0.5미만	0.5~1.0	1.0~1.5	1.5~2.0	2.0 이상	계
농가구성비						
89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 보고	16.5	28.6	24.2	17.5	13.2	100%
89년 농업수입	28.3	34.9	21.0	9.2	6.7	100%

<표4> 정부 소득 통계 방식의 기만성 대비(조사농가의 경제규모별 농가구성 비교) (단위: 천원) (자료: 농업수산물부, '농가소득조사결과보고' 1989년도)

정부수매가격	농가수입	농가수입
95,020	85,531	111,151

* 생산비는 90% 한정액의 한계 생산비, 무가변 모두 추정된 것임

가치는 가격분수에 놓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재조정된 농가소득은 <표2>와 같이 5백 61만 2천원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 표본추출의 조작에 의한 평균소득의 상향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표3>에서 보듯이

농가소득과 생산비를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는 전수조사에 의한 '통계연보'의 농가수입을 따라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규모가 큰 농가, 생산성이 높은 농가중심으로 소득과 생산비를 조사함으로써(상향편향) 결과적으로 호당평균 농가소득을 부풀린 것이다. 조금이나마 잘사는 것같이 보이게 하려는 이러한 기만적인 통계조작의 노력을 정말 '조금이나마 실제로 잘사는

것, 정부는 자기가족노동을 농촌 고용임금으로 평가(남자:시간당 1천9백42원, 여자:시간당 1천3백59원)하여 총 9만9천3백23원으로 책정했다(단보당 기준임). 반면에 농어촌사회연구소는 자기가족노동을 사회적평균임금을 적용, 현실적인 대리계수인 도시근로자가구의 시간당 노임(남·녀 구별없이 3천577원을 적용)으로 평가하여 총 2십만8천3백35원을 책정했다. 이 차이(109,012)를 가마당으로 확산하면 위 두 기관의 생산비 차이에 필적한다.

요컨대, 생산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자기가족노동의 값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농산물가격결정의 최소 기준이 되는 것이다. 농민이 생산한 경제임여의 농민 귀속 몫을 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에게 농민의 잉여노동이 얼마나 무상으로 증여되느냐를 따질 수 있는 척도이다. 생산비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은 바로 농민의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농산물가격결정을 농민과 자본간의 계급적관계를 반영하며, 이는 특히 가격결정권(그중 특히 올바른 생산비통계조사·실제조사자인) 추정조사자인-의 결정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III. 통계조사의 민주화와 민중 주도권

지금까지 농업통계의 허구성과 그 계급적 성격을 농가소득통계와 생산비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이 국가권력을 통해 통계의 조사방법·조사자·활동방식 등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때로는 부풀려거나 깎아내리고 때로는 계급적 성격을 평가하는 조사기준을 왜곡하여 제반 국가정책의 반민중성을 호소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계의 독점을 분쇄하여 전민중·전국민이 조사설계·조사과정·결과활용을 규제·감독하는 통계민주화와 말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민중주체적 입장이 반영되는 올바른 조사기준설정과 그에 입각한 대중적 요구의 실현은 민중운동의 대중화와 과학화의 기초조건 중 하나라 하겠다.

허 현 중

< 한국 농어촌 사회 연구소 연구원 >

◆독자 투고 ... '민연추' 결성에 부쳐

I. 들어가며

87년 6월 창간이후 민중들의 정치·경제·사회에 힘입어 끝까지 민중 성장을 한민족민주운동은 현재 진미세력의 아합, 반박세력의 아합, 반민주아합을 분쇄하고 자주통일, 민주주의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들속에서 민중의 정당 전선을 위한 전민연합 추진위원회(이하 '민연추')의 활동은 근로민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들에서는 '민연추'가 전체 민족민주운동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II. 민연추 발전의 과제

'민연추'가 활발히 조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살펴 보아야 할것은 민족민주운동의 과정에서 합법공간의 활용, 그것은 필수적임과 동시에 부차적 위치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 조건에서 민족민주운동은 다양한 계급계층을 반 민주당의 기치 아래 하나의 대으로 통일시키는 것, 즉 연합운동(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다양한 당파의 독자성을 보장하는)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실적 조건(진미파소 연합)에서 과도한 합법주의는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을 침해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연추 내부의 정치노선의 불일치에서 수립해야할 정권형태는 미국과 그 주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

가한 민연추'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사회 변혁에서 수립해야할 정권형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않는데 그러한 문제는 앞에서 제기 했듯이 '민연추' 내부의 정치노선의 불일치에서 수립해야할 정권형태는 미국과 그 주주세력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

개별화된 부문운동의 통일적 조직화가 관건 민중의 요구 답아 낼 정당으로 발전해야

장 큰 결집들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과 현정권의 보수대연합의 각본에 따라 진행될 영구집 권을 무로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 전민련, 전노협, 전대협등 각계급 계층별 대중조직과 야당세력의 개별적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화 하기 위한 민주대연합전선의 연대 투쟁의 일환으로 국민연합의 결성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민주대연합전선은 더욱 공고화되고 민족민주운동의 연합 투쟁체이면서 통일전선의 토대로 더욱 강화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가한 각계각층민중들, 민족자주세력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광범위한 자주 세력의 통일 전선에 의거한 민족자주 정권의 수립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민연추'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재야정치권이 부인하고 있다하더라도 중요한 문제 제기로 되는 것은 또한 그것을 추진하는 핵심간부 중의 상당수가 전민련의 활동을 주도했고, 전민련의 결성과 활동의 주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민련의 결정이 개인적 의사와 다르다하여

민중주의란 대중을 위한다고 하면서, 대중의 자발성에 굴복하여 올바른 지도와의 결함을 가로막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민중의 단결과 통일을 주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연합 운동적 단결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민중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III.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는 과거 민중의 당', '한겨레 민주당'의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는것은 앞으로의 난관을 헤쳐나 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과거 민중의 당'과 한겨레 민주당'이 무참히 패배하였던 것은 바로 전체 민족민주운동권이 하나의 대으로 형성하여 투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전민련 대의원대회에서 '정당사업'에 대한 전체 운동권의 결의를 모으지 못한 현실속에서 정당사업이 어느정도 승리를 보장할 것인가는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의 과학적 검증없이 정당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합법공간,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합법공간' 제도정치권'에서가 아니라 반합법적 공간에서 민족민주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세력화하고 있으며 그 현상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있으며 현재 그들수 밖에 없는 조건이 존재하고, 합법·반합법 투쟁을 통해서 민중의 요구를 풀어 나가고 있다.

전정으로 엄격한 현실속에 대해 우려하고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민연추'의 결성을 계기로 전체 민족민주운동권의 통일적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 근 석
< 농학 >

민주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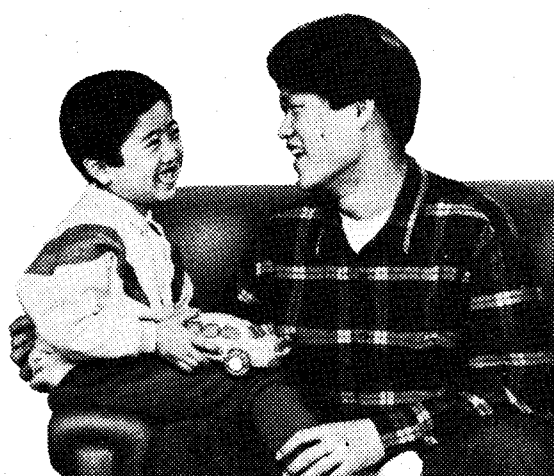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2

“삼촌! 물위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면 정말 신날텐데...”

물위로 달리는 자동차를 다른 말로 수륙양용 자동차라 하는데 이미 2차대전때 독일에서 개발해 전쟁에 사용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군에도 수륙양용 장갑차가 있지만 아직 보통사람들이 모두 타고 다니기에는 기술이 너무 복잡하고 값도 비싸기 때문에 군용 등 특수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거란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중에 있으니까, 네가 어른이 되었을때 틀림없이 플라스틱처럼 가벼워서 물위로 떠다니는 자동차, 잠수함처럼 물속을 마음대로 달리는 자동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거야.

그때, 현준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 보렴. 물 위에서 물속까지 자유롭게 달리는 수중자동차를 만드는거야.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해봐! 넓은 수평선을 마음껏 달리며 파도타기도 하고 바닷속의 신비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수중자동차-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나?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